

회 의 록

| | | | | | |
|---------------------------------------|--|--------------|--------------|-------------|---------------|
| 과 제 명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 | | | | |
| 간담회 주제 | 축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 | | | |
| 회의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동관) 412호 세미나실 오후 3시~6시 | | | | |
| 과제번호 | | 과제책임자 | 이 철 호 | 회의일시 | 2013. 10. 25. |
| 내부참석자명단 | 이철호, 이숙중, 이꽃임, 김미경 | | | | |
| 외부참석자명단 (※다수일 경우 별도첨부) | 성명 | 김용택 | 소속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성명 | 김제규 | 소속 | 한경대학교 | |
| | 성명 | 노경상 | 소속 | 한국축산경제연구소 | |
| | 성명 | 최기수 | 소속 | 농수축산신문 | |
| | 성명 | 손용석 | 소속 |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 |
| | 성명 | 조윤미 | 소속 | 녹색소비자연대 | |
| | 성명 | 박유신 | 소속 | 농수축산신문(읍서버) | |
| 내 용 | <p>○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숙중 박사가 “우리나라 축산업 현황과 축산업 허가제”라는 주제로 연구 발표 후,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했다 .</p> <p>○ 주 논 의 내용은 우리나라 축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곡물자급률과 연관관계, 축산업 허가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3시간동안 심도 깊은 간담회를 진행했다.</p> <p>○ 아래는 주 논의내용을 발췌한 것이다.</p> <p>(노경상)</p> <p>○ 당진의 “사료작물재배단지”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 석문지구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한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되었고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 현재 국내 12개 간척지가 친환경조사료 재배지역으로 설정되었으며 수원 축협이 2, 5, 6공구에 850억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컨소시엄을 실시하고 있다. 시화호도 조사료를 심고 있으며 새만금도 조사료 농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간척지에 조사료 재배는 염분 때문에 장기간 노력이 필요하다. - 2002년부터 실시한 <축산업 등록제>는 여러 가지 실효성이 미흡하여 비판을 받았다. - 우리나라 축종별 사육형태별 단위면적당 사육두수에서 덴마크와 한국 데이터 비교 시 비육한우의 경우 1마리당 단위면적이 덴마크는 1,307m², 우리나라 7m²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직접비교는 힘들다. 덴마크는 방목형태 기준 또는 1년 동안 분뇨처리 면적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축사면적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 한우, 젃소, 양돈, 양계 축종에 따라 사료 10-20% 자가생산 의무화는 필요하다. | | | | |

- 조사료 100% 자급률과 사료곡물자급률 20% 달성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TDN(가소화영양소 총량)으로 바꾸면 자급률은 더 떨어진다.
- 정부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조사료 평가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급률보다는 칼로리 베이스를 이용한 자주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해외농업개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했으며 정보제공 및 유통비 지원 같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인프라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양국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투자 협정을 실시하여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해외 농업개발은 식량보다 사료사업이 더 낫다.
- 조사료 작물 종자 구입비는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호밀, 옥수수, 귀리 같은 농업부 산물을 사용하면 생산성이 더 좋다
- 불필요한 시설 기준 및 규제 완화: 현재 축사와 집의 건축허가 기준이 같은 것은 무리이다. 축종별로 다른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다가 수정되었다. 축사도 Ubiquitous ICT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료 먹는 양 등을 전산처리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시스템은 유럽의 환경보다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 조사료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축산업 정의부터 바꾸어야 한다. 사육뿐 아니라 축산업도 관련 산업(외식, 식품, 사료 등)을 포함시켜야하고 해외농업개발과도 병행해야 한다.
- 농업은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어야한다. 농민입장에서 바라보고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야한다. 한미 FTA로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에 산업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종과 축산이 순환해야 한다.
- 한해 가축분뇨가 얼마 생산되는지? 질소량은 얼마가 들어있는지? 화학비료를 얼마를 써야하는지? 조사해서 최소 3년간 통계를 집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논밭에 뿌릴 수 있는 양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산업분야가 순수원료를 들여와 가공해서 판다. 축산도 유사한 패턴이다. 축산을 줄여 곡물자급률을 올리기보다 농업과 축산 서로 순환해야 하는 산업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중 약 3%가 가축분뇨에서 나오고 있어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정부가 산업주체가 아니라 농민이다. 그런데 현재 농민들은 스스로 알아서 못한다. 따라서 농민의 자격을 정하고 축산업은 누구나 아무데서 할 수 없는 산업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다.

(김제규)

- 경종농가에서 사료작물 재배 시 소득이 높아야 심을 텐데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답리작을 할 경우 작물끼리 서로 경합이 되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 소득이 쌀 대비 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생산 농가가 늘 수 있다.
- 재배지가 20ha 미만은 경제성이 떨어져 벼와 분리해서 '단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환경, 식량안보, 축산농가 소득 보전 등을 위해서 지역별 단지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유통문제: 전남, 충남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소비는 강원도에서 이루어져 물류비용이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 재배가 이루어져야한다.

(최기수)

- 일단 용어에 있어서 “축산사료”보다는 “가축사료”라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
- 조사료 재배가 감소하는 이유는 수입 조사료(알파파)의 가격이 더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했다. 가축 종들은 유전적으로 품종이 향상되어 과거 볏짚 먹는 것보다 수입사료가 더 적합하고 성장이 빠르다.
- 정부에서는 남부지방에 만생종 종자를 뿌리라고 추천하지만 현지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위험감수를 피하기 위해서 작부체계를 따르지 않는 게 문제다.
- 환경문제: 분뇨는 조사료 생산지역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 사료곡물은 수급문제를 가지고 풀 수 없다는 생각이다. 조사료 농지 확보문제, 축산업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 해외농업을 통해서 재배된 사료작물을 국내로 들여오기 힘들다. 실제 생산산지 판매가격이 더 비싸 국내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서 판매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면서 사료효율도 올려야 한다. 조사료 생산이 가능하지만 제한된 토지에서 곡물생산과 서로 경쟁적인 것이 문제다
- 조사료 재배를 위해서 투자는 전남지방에 했지만 실제로 이득은 중부지방 이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다.
- 축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식량자급률은 떨어진다. 칼로리(에너지) 자주올로 계산을 해야 한다.
- 축산업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양돈이다. 양돈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급률, 환경문제 등이 달라진다. 독일의 경우 분뇨를 1년에 3번 뿌려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 축종별 사료자급률을 살펴보면, 양돈/양계는 100%수입하는데 이는 양돈과 양계는 곡물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양돈은 환경오염문제, 냄새문제 등이 다른 가축보다 심각하여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초식가축은 섬유질 사료를 먹기에 자급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향후 초식가축으로 가는 게 맞다.

(손용석)

- 자급률 통계가 문제가 있다. 농업기술센터를 전문화시켜 통계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축종별 자급률 설정이 필요하다.
- 청보리와 같은 양질의 조사료는 곡물 못지않게 좋다.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농정방향으로 “산지생태축산”을 내세웠으나 비현실적이다.
- 논을 가진 사람이 축산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축 순환 산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에 축산 전문가가 없다. 우리나라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축산업이 점점 중요해졌지만 애완동물 수의사만 있고 가축 전문 수의사는 부족한 현실이다.

- 우리나라 현실상 염소가 가장 좋은 특수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염소농가가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 벚짚은 눈에 규산질을 높이기 위해서 눈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작물쪽 의견이 있으나 벚를 자를 때 지상으로부터 충분한 위치에서 자르기 때문에(어떤 경우 15cm) 그 자체에서 규산질을 높이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조사료 100% 자급이 불가능하다. 조사료는 품질에 따라 양질 조사료(소화율은 높고 배설률은 낮은)와 저질 조사료(벚짚)로 나눌 수 있다. 해외에서 100만 톤 조사료를 수입하여 TMR사료(완전배합사료)로 만들면 농가는 이것을 사다 먹이기 때문에 수입량, 즉 1년에 몇 톤 들여오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TDN 개념으로 보아야 TMR 제조 시 질 좋은 고급사료를 쓰게 된다.
- 깻대, 콩대 등 버려지는 농산물의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업(특히 초식동물) 존재가치는 충분히 있다.
- 해외농업개발: 전문가들이 해외 오지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으며 산지가격이 더 비싸게 쳐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같이 사료작물이 여전히 저렴한 곳에서 들여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김용택)

- 식량안보와 축산업 발전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묘안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이런 정책 논의 자체가 가치가 있다.
- 일본의 인구수가 우리나라보다 2배보다 훨씬 많지만 일본의 양돈 수는 1200만두이고, 우리나라는 1000만두이다. 이제는 농업에 있어서 적정선(optimal)을 계산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축산업허가제가 나온 것 같다.
- 해외농업개발은 실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야 유통과정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조윤미)

-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가격이 폭등,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가 된다.
- 2008~2010년 동물복지 토론회, 사육환경개선, 방역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으며 누구나 축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게 <축산업 허가제>라고 생각한다.
- 어떤 곡물은 식량으로 사용하기에 힘들지만 사료로써 사용하기에 충분한 것들이 있다. “식량-자원-사료”가 서로 순환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이철호)

- 축산 사료 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필요하다. 그런데 식량안보에 맞추어 사회적 consensus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축산업 허가제가 필요하다.
- 자원순환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단절이 문제다.

----- 끝 -----